

참고 7.

신 예대출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¹⁾ 자금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감독당국은 2018년 1월 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자금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대출 산정방식 개선안(이하 '신 예대출 규제')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 예대출 규제 개요

신 예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원화대출금 산정 시 가계대출은 15%를 가산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은 15%를 차감한다.

원화예대출 산정방식 변경 내용

	(%)
변경 전	$\frac{\text{원화대출금}^1}{\text{원화예수금}^2} \times 100 \leq 100$
변경 후	$\frac{(\text{가계대출}^3 \times 1.15) + (\text{기업대출}^4 \times 0.85) + \text{기타대출}^5}{\text{원화예수금}^2} \times 100 \leq 100$

주: 1) 온렌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농림축산 및 수산정책자금대출 제외

2)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및 시장성 CD 포함(각각 원화예수금의 1% 이내)

3) 새희망홀씨대출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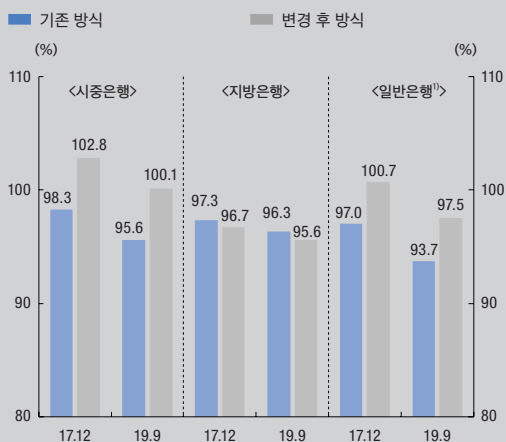
4) 개인사업자대출 및 온렌딩대출 제외

5) 개인사업자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예대출 규제 변경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7년 12월중 일반은행의 예대출은 97.0%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100% 이하)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100.7%로 높아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 비중(54.4%)이 높았던 시중은행의 예대출이 4.5%포인트 상승하여 규제비율을 상회한 반면, 지방은행(35.3%)은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일반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 변화를 통해 예대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일반은행의 예대출은 2019년 9월 93.7%로 하락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한 예대출도 97.5%로 규제기준 아래로 하락하였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³⁾

예대출 규제 변경에 따른 영향



주: 1) 예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시중, 지방 및 농협은행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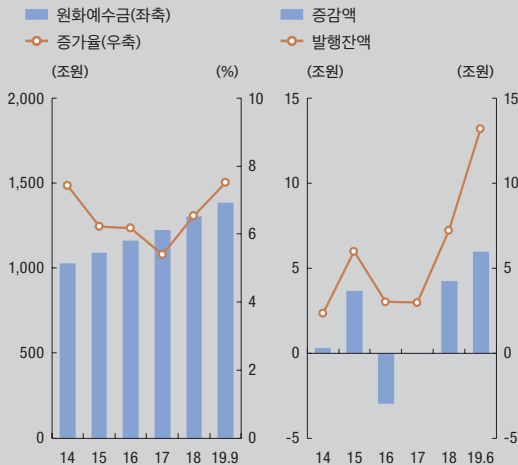
- 1) 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기업대출을 시작할 경우 신 예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2) 기업대출이 부동산산업대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은 가중치 조정에서 제외하였다. 예대출 산정방식 개편을 처음 발표(18년 1월)하였을 때에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 하향 조정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감독규정 개편안(18년 7월)에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개편안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3) 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13개) 가운데 10개 은행이 가중치 조정 시 예대출이 상승하였으며, 이 중 신 예대출이 100%를 상회하는 은행은 2017년 12월 총 6개에서 2019년 9월 총 3개로 감소하였다.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면 신 예대출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일반은행의 자금 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신 예대율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일반은행은 수신 측면에서는 원화예수금(신 예대율의 분모 항목)을 확대하고 여신 측면에서는 총대출금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먼저 일반은행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을 확대함으로써 신 예대율 하락을 도모하였다.⁴⁾ 원화예수금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7년 5.4%에서 2018년 6.5%, 2019년 9월 7.5%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8년 7월부터는 시장성 CD가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금으로 인정되면서, 기존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축소하던 CD 발행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큰 폭의 예수금 조달이 필요했던 일부 은행은 2019년 1~9월중 총 4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⁵⁾

원화예수금 규모 및 증가율 CD¹⁾ 발행잔액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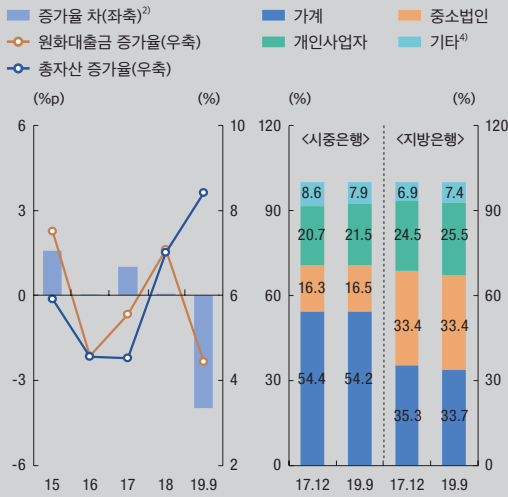
주: 1) 시장성 CD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 측면에서는 일부 은행의 경우 총대출금 증가속도를 조절하였다. 이는 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2017년 12월에는 원화대출금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1.0%포인트 상회하였으나, 2019년 9월말에는 총자산 증가율을 4.0%포인트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019년 9월중 일반은행의 예수금 조달규모(159.3조원)가 대출 증가액(121.6조원)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일반은행은 이를 주로 유가증권에 운용하였다. 유가증권 비중은 2017년말 14.8%에서 2019년 9월 15.9%로 상승하였다.

한편 예대율 규제 변경은 가계대출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 예대율 산정방식 적용 시 예대율이 상승하여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시중은행의 경우 2019년 9월말 기준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54.2%)이 2017년 12월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대출 비중(16.5%)은 0.2%포인트 상승하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정폭은 크지 않으나 가계대출의 수익률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높은 점⁶⁾, 국내 경기 둔화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점⁷⁾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비중(33.7%)이 1.6%포인트 하락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대출(38.6%)과 개인사업자대출(25.5%)이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하였다.⁸⁾

4) 2017년 7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강화(저이탈률 부채인 영업적 예금의 인정요건 강화)도 은행들의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노력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원화 커버드본드는 2014년 12월부터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금에 포함되었으나, 일반은행이 예대율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그동안 발행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신 예대율규제 적용을 앞두고 2019년 6월 국민은행이 5천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일반은행 최초로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었다.

원화대출금 증가율¹⁾차주별 대출 비중³⁾

주: 1) 시중은행 기준, 전년동기대비
 2) 원화대출금 증가율 - 총자산 증가율
 3) 원화대출금 대비
 4) 대기업, 공공 및 기타자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금융당국의 신 예대율 규제안 발표 이후 일반은행은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의 자금조달·운용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신 예대율 규제를 준수·운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일반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은행의 자금운용이 실물경제상황, 자본적정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보다 총대출금을 축소할 경우 금융중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자금조달 구조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은행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위주로 자금유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예대율 규제가 글로벌 금융규제와 상충 내지 중복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젤Ⅲ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나 두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⁹⁾ 또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도입¹⁰⁾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중복 적용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 원화 가계대출금과 원화채권 이자수익률의 차이는 2017년말 1.22%포인트에서 2019년 9월말 1.46%포인트로 확대되었으나, 동기간중 시중은행의 유가증권이 23.1%(47.0조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금은 11.4%(53.8조원) 증가에 그쳤다.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대상) 결과 국내은행은 2018년~19년 3분기중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가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예대율 규제 등의 정책이 가계대출의 팽창을 억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많이 하락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경기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원화대출금 대비)은 2017년 12월 26.6%에서 2019년 9월 24.3%로 하락하였다.
- NSFR(가용안정자금/필요안정자금)은 장기간(1년 이상) 필요한 자금을 대해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존단기 1년 이상 시장성 수신(CD, 은행채 등)도 가용안정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자금조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 예수금에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
- 현재 일반은행에는 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 3월말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시행중이다.
-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에 불과하며 감독당국도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